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행정자치부 중심의 책임읍면동제

01 현황

- 행정자치부가 안전과 복지를 키워드로 책임읍면동제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도 내 군포와 시흥(2015.4.1), 남양주(2015.9.1.), 부천(2016.1.1)이 시범사업 참여
- 책임읍면동제는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공무원 인사적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됨. 인구이동에 따라 행정구 정비 요구가 증대했으나 행정구는 시-구-읍면동의 3단계 전달체계의 비효율성문제를 발생시켜 행정구 확대 어려움
- 2가지 모형으로 추진
 - 동통합형 : 3개 동을 1개 동으로 통합운영(군포 1,2동, 대야동이 군포 1대동으로 통합)
 - 중심동형 : 시흥(대야동, 신천동), 남양주(전체), 부천(소사구)가 해당되며 현 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중심동으로 시·구의 업무를 이관하는 모형(대야동, 신천동이 대야신천 대동)
- 책임읍면동에는 4급 읍면동장 배치, 관련 업무를 위한 과가 2~4개 설치 예정
- 주요 사업 내용은 현재 시·구에서 실시하는 복지업무의 일부분(통합조사 및 통합 사례관리, 각종 시설관리 및 복지급여)등을 동으로 이관해서 운영
- 그러나 사업 초창기로서 체계가 안착되지 못해 업무분장 상의 갈등발생, 동통합과 업무이관에 따른 민원 증가 여지가 있음

행정자치부가 안전과 복지를 키워드로 책임읍·면·동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

02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시·구에서 실행하던 업무가 동에서 제공됨에 따라 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통합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복지업무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등 동료와 상급자로부터 슈퍼비전이 필요한 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책임읍면동제의 시행이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동 복지기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책임읍면동제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이 필요함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통합서비스를 기대

동 복지기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vs 유지

01 개요

-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¹⁾을 4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하자 소득대체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상향조정 필요성이 쟁점화

02 주요쟁점

■ 쟁점 1) 보험료율 인상 여부

실질 소득대체율이 25% 수준에 불과하여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명목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험료율을 크게 올려야 하므로 연금에 대한 저항 및 후세대 부담이 가중되어 적립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고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음

■ 쟁점 2)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은 주로 중간 소득 이상 계층에게 돌아갈 것이고 국민연금이 지닌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주장임. 불안정한 노동자나 비경제활동 인구는 아예 연금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더라도 짧은 고용 기간 탓에 연금 납부 기간이 짧아 수령액 자체가 작기 때문

■ 쟁점 3)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기 위한 보험료율은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인가?

청와대는 향후 65년간(2016~2080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달하고, 세금 부담 없이 보험료율을 상향(9%→16.69%) 한다면,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보건복지부 자료도 있음

■ 쟁점 4)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가능한가?

혜택이 큰 공무원연금을 '용돈연금' 으로서까지 폄하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바로 통합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부가 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체계로 바꾸게 되면 통합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 일본의 경우 공무원연금, 공제연금(사학연금), 후생연금(국민연금)을 통합키로 하고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

- 수십년 후에 불거질 기금고갈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후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연금 운영방식에 대한 건전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임

국민연금 운영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

1)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지급받는지를 뜻한다. 연금 가입기간의 소득평균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평균소득' 인데, 평균소득에 비한 연금 지급액으로 계산된다.

02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늘어나는 '고독사' 와 지자체별 대책 마련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20년 후 국내 독거노인 수는 지금보다 3배가량 늘어난 343만명에 이르며, 노인의 고독사 발생 빈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

경기도	독거노인돌봄 관련 정책들을 재점검, 강화.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 독거노인 맞춤형 보호 종합대책인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젝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안 프로젝트' 시행
대전	'노인공동가정조례' 제정,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치매·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생활비·관리비를 줄여 빈곤 노인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
경남/충남 대구/울산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안전확인 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업', 독거노인 마음잇기 사업, '지역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 사업'
경북	독거노인 응급상황에 대비해 집안에 화재, 가스유출, 활동유무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주는 '응급안전돌봄미 시스템사업'

독거노인 수의 증가, 노인의 고독사 발생 빈도 증가

2. 의회 동향

행사명	주요내용
슈뢰더 前 독일 총리 초청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및 장소 : 5. 22.(금), 11:00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강연 주제 : 독일 통일 및 연정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

-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Fritz Kurt Schröder): 독일연방공화국 총리로서 재임기간(1998년~2005년)동안 시민당과 녹색당 연정을 통해 독일의 제2 경제부흥을 이끌기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
- 경기도 연정 : 대통령제 하에서 연립정부의 개념을 포괄하는 새로운 사례로,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에 배분했다는 점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정책연합의 특성도 갖고 있음

3.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Happy Together! Art & Culture" 문화나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공연(뮤지컬, 연극 등) 및 전시(미술전시회 등) 매월 1~2회 지원 일시 : 2015. 4. ~ 12. 대상 :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이용자
경기복지시민연대 예산 Ignite! 경기복지 예산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경기도정과 의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기간 : 1회차 5.29(금)~30(토)(29일 오후2시~ 30일 오전 11시) 2회차 6.19(금)~20(토) 3회차 7.17(금)~18(토)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2015 경기자활 참여주민 '신나나데이' 가족야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16(토) 10:00 장소 : 남양주시 수동축구장

03

FACT CHECK

1. 무상복지가 소득격차 더 키웠나?

- 공공 복지지출 증가에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흡하며, 복지지출 효율성 저하의 원인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인 정책대상 선정의 오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통계청(2014)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공공복지 지출 증가와 함께 소득불평등(지니계수)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상대적 빈곤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공공복지지출의 증가는 무상복지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건강보험 지원,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것임

〈소득분배지표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니계수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0,302
상대적 빈곤율(%)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사회복지 예산비중(%)	9,7	11,5	16,0	18,2	19,5	20,7	22,2	28,4

자료: 통계청(2015), 「2014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표」.

공공복지지출 증가와 함께 소득 불평등, 상대빈곤율이 개선

〈2014년 사회복지 예산 비중 및 구성〉(단위: 조 원)

합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사회복지일반	공적연금	노동	보훈	주택	건강보험	보건의료	식품안전	합계
2014	364,031	17,987	364,031	57,156	65,619	144,588	44,576	182,343	7,440	19,451	69,665	3,221	1,064,387
2015	396,612	23,688	396,612	54,278	90,362	155,162	46,376	183,867	7,967	22,808	77,442	3,760	1,157,095
비중	34.3%	2.0%	34.3%	4.7%	7.8%	13.4%	4.0%	15.9%	0.7%	2.0%	6.7%	0.3%	100%
증감	8.9%	31.7%	8.9%	-5.0%	37.7%	7.3%	4.0%	0.8%	3.5%	17.3%	11.2%	16.7%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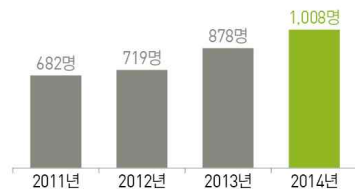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2014년 나라살림 개요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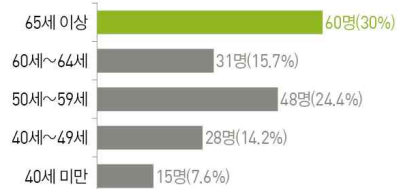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복지

1. 외로운 죽음, 무연고 사망자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2014년 경기도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 : 김춘진 의원실(보건복지부 제출)

- 모든 인간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혼자 죽어 거두어 줄 사람조차 없는 ‘무연사’는 계속 증가하여 2014년 1,000명을 넘음
- 2014년 경기도의 무연고 사망자는 서울(299명)에 이어 두 번째 많은 197명으로, 65세 이상이 60명(30%)로 노인의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독거노인 서비스강화와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이 요구됨
- 50대 무연고 사망자 수도 48명(24.4%)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예방에 관심이 필요